

‘황금알 거위’ 배 가르려는 지자체… 시금고 출연금 과다

KB국민, 광산구서 출연금 3배 제시 일부 은행들, 기초단체 금고 넘봐 금융위 “면밀한 평가체계 마련할 것”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전을 앞두고 지방은행이 지자체 금고지정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고지정 기준이 출연금만으로 정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출연금을 많이 써내는 시중은행이 유리하다는 것. 일각에서는 출연금에 대한 출혈경쟁이 향후 대출금리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6개 지방은행은 정부에 지자체 금고지정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시중은행이 과도한 출연금을 내세워 기초단체 금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이점〉

수천억~수십조원 규모 세입·세출관리, 예치금 운용수익
예대율(예금대비 대출금)관리비용 절감
지자체 각종 사업에 우선 참여
산하기관, 공무원 및 가족대상 부가영업
지자체 금고지기·타이틀로 타기관 영입에 활용



까지 넘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KB국민은행이 NH농협은행보다 3배가 넘는 출연금을 제시해 금고를 가져가고,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23년간 2금고를 맡은 광주은행이 KB국민은행에 자리를 내줬다. 3년전 대구은행도 신한은행에 안동시 금고를 내줬다. 지자체 금고선정기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올해 재계약하는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등 50개 지자체 금고지기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행정규칙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30)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8) ▲금고업무 관리능력(19)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 ▲기타사항(9)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중 지역사회 기여도에 포함된 은행 출연금 배점은 4점밖에 되지 않지만 다른 항목점수가 비슷해 은행으로선 출연금을 최대

한 높게 써낼 수밖에 없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운영능력을 나머지 평가항목으로 판단할 수 없어 결국 배점이 낮은 출연금에서 금고지정 결과가 나뉘고 있다”며 “지자체도 출연금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출연금 경쟁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은행들의 출연금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은행들은 금고 사업권을 따낸 기관에 출연금 지급은 물론이고 기관 직원들만 이용하는 우대형 특관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사업 차원에서 출연금을 내는 걸 나무랄 순 없지만 비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나가면 결국 일반 예금고객에게 돌아갈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지자체 금고 경쟁을 막기 위해 이달 내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 금고 선정 평가시 출연금 배점을 최대 4점보다 낮추고 지역 재투자 실적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지역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중소기업·서민대출 실적, 인구 대비 점포·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 등을 반영해 다양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연금이 금고은행 선정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던 이전 방식을 개선해 은행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당 평가항목이 실질적으로 금고유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유니콘 만들기… 구글·중기부 맞손

앱·게임 벤처에 마케팅비 지원 구글, ‘창구 프로그램’ 발표



민경환 구글 한국 안드로이드 앱·게임 비즈니스 개발 총괄 상무가 ‘창구 프로그램’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구글

유니콘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25위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6개에 불과하다. 미국 151개, 중국 80개인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숫자다.

유니콘 육성을 위해 구글플레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사 마케팅·홍보 지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 트렌드 및 진출 전략 교육, 앱 퀄리티 및 퍼포먼스 개선 지원, 구글 클라우드 활용 전략 교육 등 개발사 대상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선발된 60개의 개발사에는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자금이 제공된다. 이중 별도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게임 개발사에게는 ‘지스타 2019’에서 최종 쇼케이스를 진행해 게임 이용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기술 진흥 관련 정부 기관의 R&D 지원사업(최대 4억원) 연계까지 제공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0개월만에 최저치

국토부, 지난달 5111명 신규등록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수가 20개월 만에 최저치로 감소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한 9·13 대책의 여파로 풀이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2월 한 달 간 5111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지난 1월보다 21.9%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17년 6월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부터 임대 등록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된 영향이라고 국토부는 분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10년 임대시 양도세 세제혜택이 축소(면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되면서 작년 말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 초부터 신규 등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가 1736명으로 전월보다 23.4%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전월보다 22.2% 감소한 3634명, 지방은 21.0% 줄어든 147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1만8000명이다. /채신화기자 csh9101@

스타트업, 공정가치평가 외부감사서 제외

금융위, 감독지침 마련

상장폐지 대상기업 상장관리 나서

금융위원회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가중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한다. 창업 초기 기업은 공정가치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코스닥 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무더기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신(新)외부감사법과 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 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을 제공한다. 또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은 공정가치 평가에서 예외가 된다.

김 부위원장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가치평가를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움에도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검토한 내용과 간담회 의견을 참고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부감사 결과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을 위해 상장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3월 중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상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에서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 상장폐지가 돼 부담이 크다”며 “올해는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협의해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가 당초 취지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독지침이나 법령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향후 제도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교육부, 대입 단순화 통해 입시부담 경감

>> 1면 ‘사교육비 8000억…’서 계속

사교육 참여비율과 시간도 증가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인 72.8%가 사교육을 받았고, 이들은 주당 평균 6.2시간을 사교육에 썼다. 고소득가구(월소득 800만원 이상) 월 사교육비는 50만 5000원으로 저소득가구(월소득 200만원 미만) 월 사교육비 9만 9000원보다 5.1배 많았다. 고소득가구 사교육 참여율(84.5%)은 소폭 줄었으나, 저소득가구 사교육 참여율(44.0%)은 3.3%포인트 늘었다.

반면, 방과후학교 참여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방과후학교 이용 총액은 9258억원으로 전년 대비 917억원 감소했고, 참여율은 51.0%로 전년(54.6%) 대비 3.7%포인트 하락했다.

◆대입 공정성·투명성 높이고, 공교육 내실화 등 추진

교육부는 이처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자 사교육비 증감 원인을 다각도로 진단,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은 ▲대학 입시의 안정적인 추진 ▲공교육 내실화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원비 안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교육의 사회 구조적 영향 완화를 위한 정책 등이다. 대학 입시가 사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위주 선발 비율 30% 이상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입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입의 단순화를 지속 추진해 입시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대학의 신입생 평가기

준과 선발 결과 공개를 확대해 대입 투명성을 높이기도 했다. 올해 고교교육기여 대학지원사업 평가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관련 평가지표를 상향하고, 2020년부터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과 연계해 학종의 전면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관계법령을 개정해 대입 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 정보와 지역정보 공시도 추진한다.

또 입학사정관 회피·체제 제도와 입시 부정·비리 시 입학 취소 근거 규정 등 대입 공정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다수·다단계 평가와 블라인드(출신고교 등) 면접 도입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지적되는 논술전형·특기자전형 축소와 전형명칭 표준화 등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지속 추진된다. /한용수 기자 hys@